

‘法 사각지대’ 놓인 킥보드… 의식도 제도도 ‘아슬아슬’

공유경제시대의 명암

〈下〉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호장비 착용않고
속도위반 등 질서의식 부재
시장 확대…1년새 사고 2배

업계, 자전거도로서 주행
비현실적 법안 손질 요청



서울 강남구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구서윤 기자

#.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걷는 행인들 사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빠르게 옆으로 스쳐 지나간다. 서울 강남구의 거리를 걷다 보면 길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가 눈에 들어온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구를 중심으로 많은 전동킥보드 업체가 진출해 있는데 반납이 자유로운 탓이다.

공유경제시대에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핵심 이동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산업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걷기에는 힘들고 대중교통으로 가기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동 킥보드를 찾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지만 법과 질서의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한국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정의부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을 위해서는 원

동기 면허나 1·2종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많은 대여업체는 면허증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주행도 불가하고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도 필수지만 이를 지키는 사용자는 많지 않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업체들은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차도를 주행하는 경우 이용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동킥보드보다 속도가 높은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

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30개 이상의 국가, 120개 이상의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라임 관계자는 “다른 해외 일부 도시는 인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전동킥보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에 따라 관련사고도 늘면서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9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사망 4명·부상 124명)에서 지난해 225건(사망 4명·부상 238명)으로 1년 사이 사고와 부상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행인, 운전자까지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교통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몇몇 이용자의 질서의식이 부재한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마땅한 반납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고 시간 종료후 아무곳이나 자유롭게 세워두도록 하고 있는데 길을 걷다 보면 도로 한 가운데 세워진 전동킥보드, 넘어져있는 전동킥보드가 눈에 띈다.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별도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이용자가 주차를 올바르게 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용 시간

이 종료되면 바쁜 사용자들이 아무렇게나 두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안전 의식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행하는 사람이 종종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씽씽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이하로 자전거 속도와 비슷한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듯이 전동킥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전동킥보드가 원동기로 분류된 비현실적 법안이 개정된 후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관련법이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지난 7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일부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에 주행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구서윤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삼성 시기·폭 아직 미정

현대차 미래차 인재 요직에

수신료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

SK 50대초 CEO 발탁

LG ‘뉴LG’ 실용주의

》1면 ‘올 대기업 인사’서 계속

정 수석부회장이 자율주행차, 수소차 등 미래차와 모빌리티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인사 혁신’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현대·기아차의 R&D를 총괄하는 연구개발본부장에 임명됐다. 이외에 정 부회장이 직접 영입한 외국인 인사들도 각 사업부의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반면 정 수석부회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경영체제 구축 시기라는 점에서 기존 정몽구 회장 시기의 노장 CEO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이들은 각 계열사로 2선 배치돼 예우를 해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해 실적 악화를 겪은 계열사들의 수장의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50년 대생 미등기 부회장단중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유우철 현대로템 부회장,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등의 변동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제철로 자리를 옮겼지만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6% 감소한 341억원에 그쳤으며, 당기순손실은 658억원으로 72.7% 확대됐다. 현대로템도 96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확대됐다.

올해 가장 주목을 끄는 기업은 LG다. 취임 2년차에 접어든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기존 보수적인 기업문화에서 탈피, ‘실용·성과주의’ 인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전통적으로 ‘정도경영’을 추구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광모 회장이 새로운 스타일의 인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LG그룹이 이달 말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11월 28일 연말 인사를 단행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부회장이 경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기존 부회장단의 거취와 임원 승진폭 등이 관련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LG그룹 6인 부회장단 가운데 구 회장 취임 이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은 조성진 LG전자 부회장과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두 명뿐이다.

재계 관계자는 “LG는 이미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외부 수혈’에 나서며 혁신적 인사 스타일을 드러냈으며, 올해도 ‘뉴 LG’를 향한 흔들림없는 인사 기조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의 인사는 예년처럼 12월 초중반쯤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임원 직급폐지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사 규

모도 전년보다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취임 3년차를 맞은 간판 CEO들의 이동 여부가 관심사다. 2016년 말 선임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장동현 SK㈜ 사장의 연임 여부가 이번 인사에서 결정된다. 일부 CEO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최측근이긴 하지만 교체되거나 다른 계열사로 이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최 회장의 해외 출장에 늘 동행해 최 회장의 ‘복심’으로 통하는 유정준 SK E&S 사장의 이동도 주목받고 있다. 유 사장은 2013년부터 SK E&S의 CEO를 맡고 있다.

최 회장이 최근 국제 무대에서 사회적 가치와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인재의 영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디지털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50대 초중반의 신입 CEO를 대거 발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9월 ‘2019년 CEO 세미나’ 폐막 연설에서 “CEO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이너 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이 이끌고 있는 롯데그룹은 연말 대규모 인사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 회

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칼을 뽑을 것으로 보인다.

고 조양호 회장 타계 이후 회장직을 승계한 조원태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진그룹은 이달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최대 현안이었던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재산 상속 문제를 원만히 매듭지은 만큼 조기 인사를 단행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1면 ‘유료방송 M&A’서 계속

3년 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조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돼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며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를 막기 위해 2022년까지 ▲케이블 TV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케이블TV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 감축

금지 ▲8VSB(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방송)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당초 쟁점이 됐던 교차판매 금지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시장에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흡소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어르신~ 일자리 찾으세요?

맞춤형 일자리를 무료로 소개해 드립니다.

대상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취업희망자
이용방법 신분증, 이력서 지참 후 방문

사장님~ 시니어 채용 원하세요?

전문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어르신을 무료로 소개해 드립니다.

대상 만 55세 이상 시니어 채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
이용방법 사업자등록증, 채용담당자 신분증 제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서울특별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TEL. 02.924.9433
FAX. 02.929.4661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5길 10 6호선 고려대역 2번출구 도보 15분